

『노동리뷰』 7월호 - 이슈분석

■ “파업성향 국제비교”(김정우 책임연구원)

- 노동쟁의 통계의 산정 기준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의적 국제비교는 ‘통계의 오류’에 빠질 위험이 있음.
※ 근로손실일수, 분규지속일수, 참가자수 등의 통계산정 최소기준이 높은 나라일수록, 그리고 정치파업이나 비조합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실제 노동쟁의의 현실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음.
- 지난 10년간(1994~2003년) 우리나라의 파업성향(임금근로자 1,000인당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)은 90일로 OECD평균(51일), EU평균(63일)보다 높음.
- 그러나 이는 1998년 이후 OECD 및 EU 국가들의 파업성향은 낮아진 반면, 우리나라는 IMF 이후, 고용조정, 민영화, ‘되찾기 임금교섭’ 등의 분쟁과정에서 오히려 파업이 늘어났기 때문임(1994~1997년은 비슷한 수준임).
- 특히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상당히 낮아졌던 파업성향이 IMF 이후 증가한 이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위원

Tel : 783-7155 E-mail : kjw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파업성향 국제비교

담당자	김정우 책임연구원
전화	02)783-715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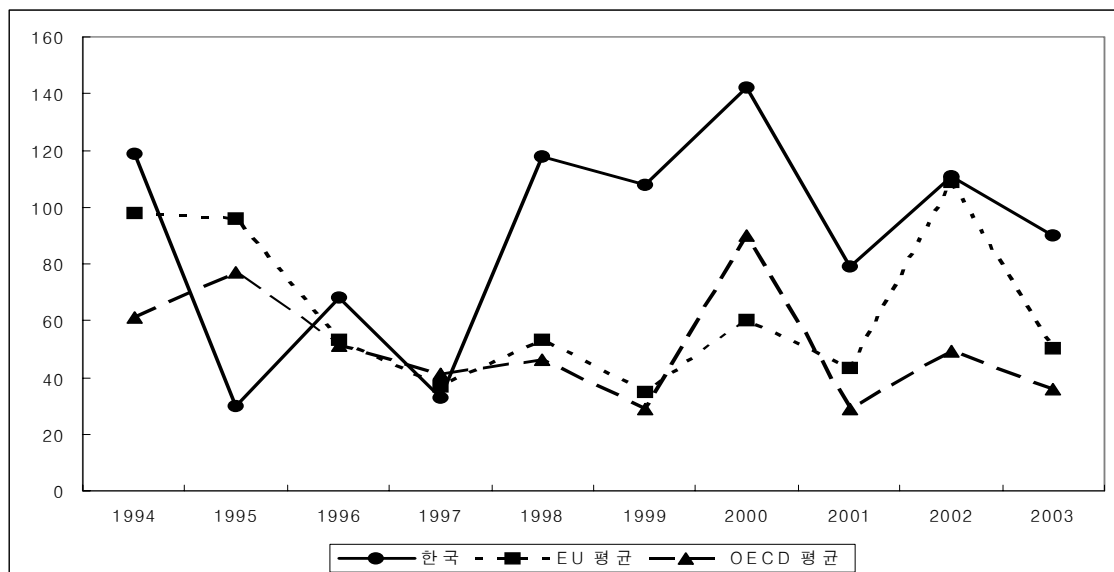
○ 노동쟁의 통계를 산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 비교 시에는 이러한 차이를 전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.

－ 대개 근로손실일수, 분류지속일수(혹은 시간), 참가자수, 기업규모, 부문 등에 최저기준을 두어 통계산정 여부를 결정하며, 정치파업이나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노동자(비조합원 등)의 포함여부도 국가별로 다름.

※ 통계산정의 최저기준이 높을수록, 정치파업과 비조합원이 포함되지 않을수록, 노동쟁의의 통계수치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음.

○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파업성향(임금근로자 1,000인당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)은 90일로 OECD평균(51일), EU평균(63일)보다 높음.

[그림 1] 전산업 피용자 1,000인당 노동손실일수 국제비교(1994~2003)



자료: Monger, J., "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abour Disputes in 2003" *Labour Market Trends*, 2005 p.16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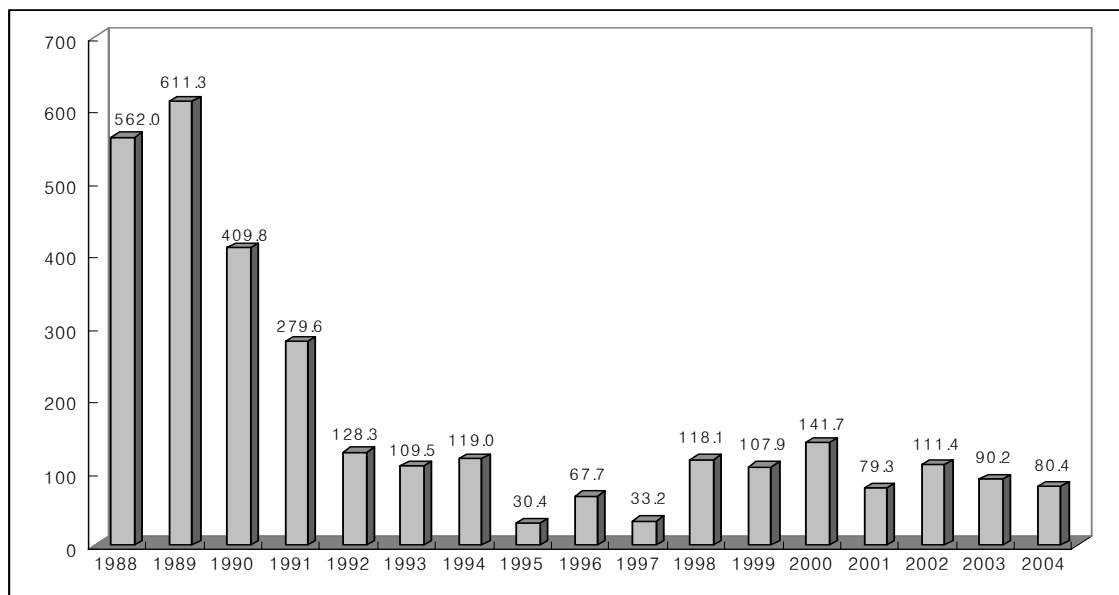
노동손실일수는 ILO; Eurostat; National Statistical Offices

피용자는 OECD

한국은 노동부 내부자료와 통계청의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를 활용함.

- 그러나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우리나라와 OECD 및 EU의 파업성향은 비슷한 수준이었고, 차이는 199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함.
- 이는 1998년 이후 OECD 및 EU 국가들의 파업성향은 다소 낮아진 반면,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, 민영화, '되찾기 임금교섭' 등의 분쟁과정에서 오히려 파업이 늘어나서 발생한 것임.
-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파업의 권리를 누리기 시작한 1987년 이후의 파업성향은 초기 3~4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.

[그림 2] 우리나라의 피용자 1,000인당 노동손실일수 추이(1988~2004)



자료: 노동부 내부자료;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 원자료.

- 노동조합 설립 및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1987년 이후 1991년까지 초기 4년간 높은 파업성향을 보인 것은 경기호황, 노조의 높은 교섭력, 노동자 대중의 누적된 불만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것임.
- 이후 1992년부터 2004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 파업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특히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상당히 낮아졌던 파업성향이 IMF 이후 증가한 이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.